

60년 '보호의 저주'에 빠진 US스틸

광화문·뷰



김신영
국제부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기 취임 후 철강 관세를 '예외 없이 25%'로 올렸다. 그러면서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미국이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전임 대통령인 조 바이든도 비슷한 논리를 폈다. 두 사람만 특이한 것은 아니다. '철강은 전략 물자'란 주장으로 무역 장벽을 높여 철강 산업을 보호해왔다는 미 정부의 기조는 수십 년째 이어져 왔다. 마이클 무어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전미경제연구소(NBER) 보고서에 "철강 업계는 지난 30년간 단일대외로 수입(輸入)을 막으며 애썼고 정치권도 호응했다"고 썼다. 보고서가 나온 때가 1996년이다. 미국 철강 보호무역의 역사가 60년을 뒀다는 얘기다.

장 하악해진 이유를 "정부의 보호에 중독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이들 경제학자는 "미 철강 산업이 값싼 수입품 공세로 무너졌다"는 주장이 진실이 아니라고 말한다. 오히려 역사가 긴 '공룡' 철강 기업들이 과도한 비용과 기술 도태에 인위하게 대처하는 사이날렵하고 잽싼 미국 내 신규 철강 기업이 시장을 빼앗은 것이 결정적 원인이라고 본다. NBER 보고서에 따르면 미 철강 산업의 쇠락이 본격화한 1979~1991년, 예전 방식대로 고로(高爐)를 쓰는 대형 철강사의 시장 점유율은 64%에서 34%로 줄어든 반면 '미니밀(소형 전기로)'

카터부터 트럼프까지 "철강 보호" 관세 올리며 무역 장벽 세워 보호 정책 60년 이어졌는데 美 철강 기업은 왜 무너졌을까

이라 불리는 첨단 기술로 무장한 미국 내 신생 기업의 점유율은 8%에서 24%로 늘어났다. 수입품 비율은 15%에서 18%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제대로 된 회사라면 이런 통계를 보고 신기술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의 기존 철강 기업들은 다른 전략을 폈다. 노사가 결합한 강력한 이권 단체를 만들어 '수입을 막아달라'며 정치권에 매달렸다. 경합주가 몰린 중부 지역에 기존 철강 기업이 모여 있다는 특성은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높여 주었다. 사측은 노조의 '몽치 표'를 정치권에 미끼로 썼고, 노조는 이런 구

조를 지렛대 삼아 급여를 대폭 올렸다. 정치인 입장에서 표를 몰아준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철강 기업·노조와 정치권이 맞물린 이 공생 관계는 '강철 삼각지대(steel triangle)'라 불린다. 지미 카터부터 트럼프까지, 모든 미 대통령이 예외 없이 철강 산업을 위한 무역 보호 조치를 공약하고 시행한 배경이다.

1970년대 이후 '미니밀' 방식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인 신생 미국 기업의 대표주자는 뉴코어(Nucor)다. 현재 미국 시장 점유율 1위다. 이 회사의 초기 CEO였던 켄 아이버슨은 1984년 미 하원 청문회에 나가 모든 무역 장벽을 없애 달라고 호소했다. "관세·비관세를 포함한 모든 무역 장벽은 철강 산업의 현대화를 지연시키고 소비자에게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입힐 겁니다. 차라리 재교육 프로그램이나 세금 혜택을 통해 신기술 도입을 장려해 주십시오." 정치권은 듣지 않았고 그의 예언은 현실이 됐다.

트럼프는 1기 때도 철강 관세를 25%로 올렸다. 그 결과 미국 철강 산업 일자리가 1000개 늘었다고 한다. 하지만 관세 인상으로 철강 가격이 올라, 그 피해는 자동차·가전·건설 등으로 일파만파 번졌다. 비용이 늘어나자 고용을 줄인 이들 업종의 일자리는 7만5000개가 사라졌다. 반복해 언급되는 통계이기엔 알았을 텐데, 트럼프는 관세를 또 올렸다. 정치 논리가 경제를 넘어서면 이런 부조리가 생긴다. 미국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우정의아트 스토리 [5/4]

르누아르가 그린 무도회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화가 피에르 오귀스트 르누아르(1841~1919)의 '물랭 드 라 갈레트의 무도회'다. 워낙 유명한 작품이니 독자들 눈에도 익숙하겠지만 잘 들여다보면 어딘가 낯선 구석이 있다. 틀림없이 같은 배경, 같은 인물들인데 얼굴과 의복의 세부가 흐릿하고 색채 또한 조금 어둡다. 사실 르누아르는 같은 해에 똑같은 작품을 두 점 그렸는데, 널리 알려진 건 파리 오르세 미술관 소장품이고, 지금 이 작품은 작은 버전이다. 르누아르가 둘 중 어느 것을 먼저 그렸는지는 알려지지 않았고, 1877년 전시에서 '물랭 드 라 갈레트'가 호평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과연 둘 중 어느 것이 전시장에 걸려 있었는

지도 모른다.

이 그림은 1990년 5월, 일본 기업가 사이토 료에이가 소더비 경매를 통해 7800만달러(당시 환율로 557억원)에 구매했는데, 그는 동시에 크리스티 경매에서도 빈센트 반 고흐의 '가세 박사의 초상'을 8250만달러에 구입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두 가격은 꽤 오랫동안 최고의 회화 경매가라는 기록을 유지했다.

사이토는 인상주의 최고의 걸작을 품에 안은 지 고작 6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문제는 구매 직후 거액의 세금을 내야 했던 사이토가 자손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를 또 내느니 차라리 두 작품과 함께 자신을 화장하겠다고 공언



피에르 오귀스트 르누아르, 물랭 드 라 갈레트의 무도회, 1876년, 캔버스에 유채, 78 × 114cm, 개인 소장.

했던 것. 실제로 그의 사망 뒤로 이 둘의 행방이 한동안 묘연했다. 전 세계 미술인들은 진정 두 작품이 재가 되어 사라졌을까 걱정했지만, 다행히도 '물랭 드 라 갈레트'는 스위스, '가세 박사'는 호주의 개인 소장가가 갖고 있다고 한다. 주인이 누군지는 몰라도 좋으니, 일단 무사하면 있으면 되겠다.

포스텍 교수·서양미술사

社 說

韓 대항까지 9번 탄핵 다 기각, 崔 탄핵 철회하라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말 내린 행위 공모·강조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한 지 87일 만이다. 한 대항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했다. 다수 재판관들은 내란 공모와 특검 임명 지연, 김건희 특검법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등 네 가지는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법률 위반이지만 파면할 사유는 아니라고 했다.

이로써 민주당이 강행한 13번의 총리·장관·검사 탄핵소추안 중 현재 결정이 난 9건 모두 기각됐다. 정당성 없는 정략적 탄핵이었다는 점이 재차 확인된 것이다. 한 대항 탄핵소추는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에 따른 극도의 정치적 혼란과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경제·안보 위기 속에 강행됐고 국정 혼란과 국론 분열은 한층 심화됐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조급증 때문이었다. 국정 문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이 대표의 반성과 사과가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한 대항과 한재를 향해 "즉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내리라"고 압박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그동안 경제·안보 등 국정 전반을 총괄하고 산발 등 재난 대응까지 맡아왔다. 탄핵 사유인 재판관 임명 지연과 내란 공모는 이미 한 대항 탄핵 심판에서 기각된 사안이다. 한 대항 복귀로 탄핵의 실익도 없다. 정치적 보복의 오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최 부총리는 경제 사령탑이다. 민주당은 탄핵 폭주와 국정 방해를 멈추고 최 부총리 탄핵도 당장 철회해야 마땅하다.

현재는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의 국회 의결정족수를 대통령 기준 200석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인 151석이라고 판단했다. 권한대행은 헌법상 예정된 기능과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지 새로 헌법적 지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권한대행은 대통령 역할을 실질적으로 대신하는 막중한 자리다.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를 '국회 과반'으로 한다면 국회 과반 다수당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언제든 정략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 이례선 비상 시국에서 정상적 국정 수행이 어려워진다.

2명의 헌법재판관이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를 200석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민주당은 실제로 "권한대행을 물려받은 국무위원들"을 따박따박 탄핵하겠다고 한 바 있다. 반복적 탄핵과 극한 대치 국면이 이어져 국정 안정은 기대할 수 없다. 권한대행 탄핵소추 정족수에 대한 헌법적 논의가 더 이어졌으면 한다.

대통령 되겠다면서 법 무시하면 누가 법 지키나

대장동 민간 업자들의 배임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두 차례 불출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가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이 대표는 24일 재판엔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다. 대놓고 법을 무시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증인은 원칙적으로 법정에 출석해 진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증인의 진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무단으로 불출석하면 강제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법에 규정된 것도 그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벌칙에 앞서 증언이 국민의 의무라는 생각에 출석한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다. 누구보다 법을 중시하고 지켜야 하고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원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도 무단으로 불출석했다. 법원이 자신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특권 의식이 깔려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과거 검사 사칭,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형 4건을 받

았다. 지금도 선거법 위반, 불법 대북 송금, 대장동 비리, 위증 교사, 법인 카드 사적 유용 등 재판 5개를 받고 있다. 우리 사회 어떤 국민이 이런 재판들을 이 대표처럼 무시할 수 있나.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불출석하면서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주당 천막 당사 현판식과 최고위원회 등에 참석했다. 민주당은 이미 광화문 대로의 인도에 천막 여러 개를 쳐 놓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에 탄핵 선고를 압박하겠다고 천막 당사까지 만들었다. 지자체장 허가 없이 도로에 설치한 천막은 다 불법이다. 이 천막 당사 역시 불법이다. 앞서 서울시와 종로구청은 천막을 철거하라고 민주당에 여러 차례 통보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이란 중차대한 문제를 앞두고 지엄판단적인 문제"라며 법을 묵살하더니 천막 당사를 또 만들었다. 자신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나. 대통령이 되고 집권당이 되겠다는 사람들의 법 무시가 도를 넘고 있다.

北 인권 지원, 美가 안 한다면 한국이 하자

트럼프 미 대통령이 보조금을 삭감하면서 국내외 북한 인권 운동 단체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 북한 인권 단체에 연간 1000만달러를 지원해온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 민주주의진흥재단(NED) 예산이 삭감됐다. NED의 경우 작년 대북 방송 등 25개 사업에 500만달러를 지원했다. 1982년 만들어진 NED는 북한 인권 운동 지원과 차세대 탈북민 지도자 양성도 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대북 인권 단체 지원을 통해할 때 NED 지원금이 숨통 역할을 했다. 전 세계에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북한 주민에게 민주주의를 전파하던 미국의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도 최근 신규 프로그램 송출을 중단했다. 두 매체의 한국어 방송에도 연간 1000만달러의 미국 정부의 보조금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민들은 "두 매체의 방송은 독재와 고립 속에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줬다"고 했다. 북한 주민에게 외부 소식을 알리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는 일은 원래 미국

이 아닌 한국 정부가 앞장서야 했다. 그러나 한국 좌파 정권에 북한 인권은 금기 사항이었다. 북한의 김씨 왕조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나아졌다고 하지만 올해 대북 인권 단체 지원 예산은 29억6000만원에 그쳤다. 북한 인권 활동 제도화와의 거리가 멀다. 이를 위해 2016년 북한인권재단을 설치하는 북한 인권법이 발의 11년 만에 시행됐다. 그러나 민주당이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 방식으로 9년째 출범을 방해하고 있다.

다음 달 유엔에서 채택될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는 북한의 파병을 규탄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초안 제출 국가는 폴란드와 호주다. 민주당과 진보파들은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은 물론 포로로 잡힌 병사들이 호소한 한국 송환에도 관심이 없다. 북한 인권을 우리는 외면하고 국제사회가 지원하는 비정상적 정상으로 돌려야 한다. 미국이 북한 인권 운동 지원을 중단한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그 역할을 하면 된다. 여야가 있을 수 없다.

26일 2심 유죄판 (아수라 대기실) 입장

한 총리 귀환은 《윤 대통령 부활》 전주곡 ... 이제 《이재명 심판》이다

3월 말 ~ 4월 초 대통령 탄핵 무산된다면? | 이재명과 시간 싸움,尹 대통령 유리해진다 | 《대한민국 말아먹기》분쇄된다

newdaily.co.kr 뉴데일리



▲ 이재명당 탄핵 미사일 30발 중 파괴력 #2(한 총리 거남)가 과녁을 한참 빗겨갔다. #3(최재해 감사원장)도 마찬가지로 9발 모두 빗방이었다. #1(윤 대통령 표적)도 곧 빗나갈 것으로 점쳐진다. 시진핑에 "세계- 차베스에 "현금살포 따라해유- 이재명의 말로는 《아수라》형 특급열차 탑승이다. © 뉴데일리

2024년 12월~2025년 1월은 《전체주의 극좌+국민의힘 안의 탄핵파+기회주의 언론계》에 의한 《자유대한민국 죽이기》한철이었다.

2월 4일~3월 23일까지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 《부활》을 의지했다.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귀환은 그 《부활》의 전주곡일까? 3월 말~4월 초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로 가는 길 다키!

毒(毒) 나무엔 독극물 열매 맺히는 법

한덕수 총리 탄핵은 처음부터 불법이었다. 절차에서 대통령 탄핵안은 200표가 나와야 가결된다.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권한대행》이었다. 우원석이 그걸 151표면 된다고 멋대로 바꿨다. 불법·무효다.

쟁점으로 볼 때도 한덕수 총리 탄핵은, 산 사람을 《털도 안 뽑고 잡아먹은》 만행이었다.

"① 내란 공모 ②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③ 내란 상설 특검 회피 ④ 김건희 특검법 거부 ⑤ 한동훈과 공동국정 운영 시도, 어찌고저찌고" (X매) 같은 소리다.

《내란》이란 말부터가 《허구》다. ①②③④? 법이 정한 그대로 한 것뿐이다. ⑤=죄? 그럼 자기들은 왜 한동훈을 죽이지 않고 《윤석열 탄핵》을 함께 했나?

첫 단추 잘못 끼웠다. 이하 모두 잘못 끼웠다. 독나무에 난 열매도 독이다. 무효다.

이재명의 말로(末路)

그렇다면 이제 어찌 될 판인가? 26일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이 있다. 유죄판. 이재명은 그걸로 《아수라 행 특급열차》 탄다. 대법 확정 땀? 끝. 종(終). 망(亡). 쇠(鎊). 진(鎊). 말(末). 흥(興). 황(荒). 폐(廢).

이런 일정이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의 《시간 싸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길 확률이 확 높아진다. 나중에 판결 받는 쪽이 유리하니까. 먼저 판결 받는 쪽이 망하는 거니까.

윤 대통령 탄핵은 그래서 각하-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었다.

조기대선) 박살 내자

현재 재판 초기엔 《우리법 재판관들》이 초시계까지 들어 대고 후타다 《인용》하려 했다. 피고인 발언도 허용하지 않았다. 검찰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그러자 * 자유 국민 * 2030 * 대학생 * 호남 포함 전 자유 국민이 왕창 들고 일어났다!

각성이었다! 감격이었다! 환희였다! 부활이었다! 그러곤 마침내 《윤석열 구속 취소》와 《한덕수 총리 복귀》! 그러나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를 《희망 고문》하진 말자.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자세로 《자유 아니면 죽음》을! 탄핵 정파와 탄핵 언론의 《대한민국 말아먹기》 분쇄! 《조기 대선》 박살! 우리 승리하리라!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5년 3월 23일 게재 되었습니다.



NO. 141 뉴데일리 칼럼 프린트 버전 시리즈

뉴데일리 콘텐츠를 지원해주세요

뉴데일리를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7-880570 뉴데일리(주)